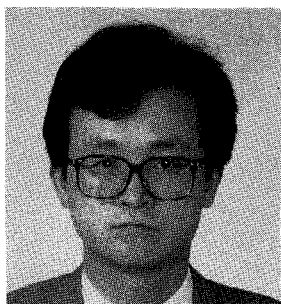


「보전」에 우선순위를 두는 발상의 전환을



金鐵雄
(경향신문·생활과학부기자)

시대구분에는 항상 무리가 따르지만 환경문제와 관련, 최근 자주 거론되는 10년단위의 시대구분은 그중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는 과거 60·70년대의 개발지상주의 시대에서 80년대 ‘개발’과 ‘보전’의 병행시대를 지나 이제는 환경보전에 좀더 역점을 두는 90년대를 맞았다는 것이다.

이는 60년대말 보사부내 공해계로 시작된 우리나라 환경행정기관이 70년대 공해과, 공해관리관(3급)을 거쳐 80년 환경청으로 독립됐고 90년벽두에는 기관장이 국무위원인 환경처로 격상돼온 ‘가시적’ 과정보다 일견 설득력이 있다.

그러면 진정 ‘보전’을 중시하는 90년대를 맞아 각종공해로 부터 찌든 강도를 소생시킬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일까. 쉽게 말해 우리는 이제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악취·소음공해없는 세상에서 살수 있는 것일까.

유감스럽게도 이같이 소망스런 시대구분에도

불구, 환경문제에 관한 우리의 삶은 그다지 개선될 것 같지 않다.

그 실질에 변화가 없는 한 이같은 시대구분 자체는 전혀 의미가 없다.

몇가지 현상을 짚어볼때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우선 정부의 환경투자미흡과 대다수국민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수준을 지적할 수 있다.

잘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난해 환경투자액은 환경처 건설부 교통부등 관계부처를 통틀어 1천7백16억원으로 국민총생산의 0.15%에 불과했다. 이는 올림픽이 열렸던 88년의 2천1백60억원(GNP대비 0.2%)보다도 오히려 크게 줄어든 것이었다.

정부예산과 대비한 환경처(청)예산도 지난해 5백64억원으로 0.29%.

환경문제가 우리보다는 덜 심각한 선진제국의 환경부문투자가 국민총생산의 0.5~1.7%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

지난 11일 환경처가 지난 3년여동안 추진해온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지정인이 환경보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그런점에서 괄목할만한 것이었다.

이 대책지역지정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가 크게 제한되고 그대신 주민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수도권과 중부권 1천8백만 주민들의 식수원을 살리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대책이 확정되기까지 환경처는 술한 우여곡절을 겪어야했다.

바로 「개발」우선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시기상

조론」이 정부각료들사이에서 절대우세했기 때문.

曹京植환경처장관이 털어놓은 후일담에 따르면 이 대책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거의 「유보」쪽으로 결론이 모아졌으나 민간위원들의 「지원사격」과 환경처의 치밀한 준비덕택에 가까스로 관철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의 1차환경보전위는 그해 8월 「수도물과동」의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열린 것이었다.

이 첫 회의에서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경기도와 충청북도가 주민들의 경제활동위축등을 이유로 대책지역안을 맹렬히 반대한 것은 그렇다치자. 이밖에 농림수산부 건설부 보사부 상공부 경제기획원 체육부 교통부할것 없이 이해관계가 걸린 부처는 모두 「벌레같이」 들고 일어나 「시기상조」론을 외쳤던 것.

수도물과동이 있을 때마다 거의 「대표」격으로 욕을 먹어온 당시 환경청은 결국 야속한 심정으로 물러나야 했다.

절대적 「세불리」를 통감한 환경처는 그후 몇가지 「공작」을 펴야했다.

우선 지난4월 대책지역지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고시, 배출기준을 다소 강화하는 등 훗날 더욱 강력한 규제의 발판을 마련했다.

환경처는 이어 환경관련 부처장관 등 참석자가 25명이나 되는 환경보전위원회의 능률적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위원수를 15명으로 줄이는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탈락」을 거부하는 관계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번 대책 역시 결코 만족스럽다고 할수 없는 이유는 그 내용이 당초 원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책지역을 1·2권역으로 나눈 것도 결국 심한 반발을 보인 관계부처와의 타협의 산물이었다 할수 있다.

이 대책지역지정과정에 관한 다소 장황한 설명은 환경문제가 아직도 절대우위의 개발론에 밀려 제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잘 반영해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경우로 팔당호골재채취추진사업을 들수

있다. 『수도권신도시의 「개발」을 위해 팔당호 상수원의 골재를 파내야한다』는 밀어부치기식 논리가 정책결정의 전과정을 지배하고 있었다. 정작 환경처는 이 계획단계에서 철저히 소외된채 신문보도를 통해 그런 사실이 있음을 알았던 것이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정부에게만 맡길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국민의 인식변화 역시 매우 절실하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 분야에 있어서도 일부 뜻있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인식수준은 60·70년대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쓰레기분리수거운동이 지지부진하고 비만오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폐수를 강물로 흘려보내는 악습도 여전하다.

최근 설악산의 무분별한 개발의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되자 그지역 변영회와 일부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세계적 명산인 설악산은 현재 91년도 세계잼버리대회행사장 2백50만평이 조성되면서 천연림이 파헤쳐지고 콘도미니엄이 국립공원주변에 마구 들어서 「누가봐도」 그 훼손우려가 심각한 상태. 물론 이 과정에서 환경보전문제는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반발이유는 간단하다. 『왜 개발을 해서 혜택을 보려하는데 남의 잔칫상에 감나라 배뉘라하느냐』는 것이었다.

이들은 또 『그동안 지역개발에서 푸대접을 받아온 강원도민이 바라는 것은 자연의 방치가 아니라 관광수용시설의 확충과 개발』이라고 주장한다.

분명 타당한 부분이 있는 주장이나 과연 목전의 개발이 진정 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한번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악산의 훼손에 대한 매우 타당한 지적이 이같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은 아직도 「개발론」의 목소리가 「보전론」에 앞서고 있음을 반증한다.

개발은 쉽고 보전은 어렵다. 그러나 「쉬운 개발」에 앞서 「어려운 보전」문제를 우선순위에 두는 「법상의 전환」이 없이는 우리의 환경은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